

전주 전역 소독활동 본격화

시, 소독약품 무료 지원·소독장비 무상 임대… 26~29일까지 소독주간 운영

전주시가 코로나19 차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소독을 위해 소독약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소독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기관, 단체, 시민과 손잡고 전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26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주간으로 정하고 소독약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소독장비도 무상 임대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정기적인 일제 소독으로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함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이다.

소독주간 첫 날인 26일 시는 35개 동 주민센터에 각각 소독약품을 비치하고 20리터, 6리터, 6리터 미만 분무기를 구비해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당초 동주민센터 전체에 비치해놓은 1만8251는 시민들의 폭발적인 참여 속에서 단시간에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20만1를 구입해 공급 중이다. 소독약품 2001면 한옥마을 일대를 소독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소독약품을 담은 병병을 지원하고 소독장비의 경우 소독 후 반납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정 내에서 사용 중인 분무기 등을 활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시는 이 같은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시민들의 높은 참여를 속에서 민·관이 함께 전주한옥마을 일대를 시작으로 전주 전역의 소독활동에 돌



전주시가 26일부터 29일까지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민들이 전주역에서 소독활동을 펼치고 있다.

입했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 직원, 관계 공공기관 직원, 단체, 시민 등 총 450여명은 고숙·시외버스 터미널과 전지역, 첫마중길, 전주한옥마을, 덕진공원, 객리단길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다중이용 집합장소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활동을 펼쳤다.

오늘은 전북대, 전주대, 전주교육대 등 대학가와 주변 상가, 원룸, 팔달로·기린대로변 주요상가, 서부신시가 지 등에 대한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28일의 경우 공공·유관기관과 주변 주요상가의 소독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집, 가게, 골목길, 공동주택 등 공동체 공간에 대한 소독활동을 추진기로 했다.

시는 이번 주 일제 소독주간을 운영한 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 모든 시민과 기관·단체 등이 전주 전역에 대한 소독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와 산하

기관 직원, 각 시설 관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주역, 고숙·시외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체육시설,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소독방역을 진행기로 했다.

시민들의 경우 내 집과 가게, 동네, 집 앞 골목길, 공동체 공간 등을 소독하고 직장인들의 경우 사무실과 작업실, 영업장 및 주변 등을 일제히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와 산하기관 직원, 각 시설 관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주역, 고숙·시외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체육시설,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소독방역을 진행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는 철저한 소독이 최선의 예방”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독제와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제15회 학술상 수상자 7명 선정

기초·임상의학 분야 연구·학술활동 장려 위해 우수논문상 4명·우수연구자상 3명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기초 및 임상의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15회 학술상(우수연구자상 및 우수논문상) 수상자 7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논문상은 △중앙혈액내과 임호영 교수 △비뇨의학과 박종훈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이선영 교수 △해부학과 최원호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우수연구자상은 △신경과 강현구 교수 △비뇨의학과 신유성 교수 △영상의학과 좌효성 교수 등이다.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5회 학술상(우수연구자상 및 우수논문상)은 기초 및 임상의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높이고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의학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내과와 외과, 지원, 기초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수논문상은 SCI(E) 논문(원저)에서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 최고 점수인 논문을 선정했으며, 우수연구자상은 SCI(E) 논문 다편수를 기준으로 했

다. 선정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200만원이 지원된다.

조남천 병원장은 “이번 수상은 기초 및 임상의학분야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병원의 발전과 위상을 위해 노력해준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 한해도 전 의료진이 합심해 연구 중심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지역 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덕진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내달 20일까지 접수… 1급 발암 물질 석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비용 지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형조)는 시민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급 발암 물질 석면에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덕진구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 부담 지원을 위해 올해 사업비로 주택 및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163백만원, 지붕개량 공사비 64백만원 등 총 227백만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 55동, 지붕개량 15동으로 총 7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슬레이트 철

거·처리 비용은 최대 344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까지 지원하며, 취약 계층의 경우는 지붕개량 지원사업과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며, 타부처 연계사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계층, 기존 중위소득이한 가구,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및 지붕개량 일정 등을 신청자와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신청 및 공급한 사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덕진구청 자원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덕진구는 지난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17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으로 관내 74가동을 지원했다.

김형조 덕진구청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석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코로나19 신속대응팀 편성·운영

보건당국으로부터 연락되지 않는 대상자 소재 파악 등 협조키로

전북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요청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6일부터 도내 15개 경찰서에 신속대응팀을 편성, 운영한다.

경찰서 신속대응팀은 도내 15개 경찰서에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수사, 형사, 사이버, 정보, 여성·청소년 등 유관부서 경찰관 10~20명으로 구성된다.

편성 인원은 현재 총 244명이며 필요에 따라 인력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신속대응팀은 앞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연락되지 않는 대상자들의 소재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 신속히 소재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올해 68억원 들여 총 343대 구매 지원

전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내연기관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총 68억원을 들여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285대와 전기화물차 58대 등 총 343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사업 물량인 174대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원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720만원까지이며, 화물차의 경우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서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전주시내 소재를

둔 법인, 사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단,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최근 2년 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과 법인은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사이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신청기간 내 신청자별 총 출고·등록이 빠른 순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전기화물차는 신청기간 내 접수가

빠른 순으로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택시 등에는 전기승용차 57대, 전기화물차 12대를 별도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단, 시는 전기자동차의 빠른 공급과 신속 추진을 위해 전기차량 출고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순위자로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방침이다.

박문석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063-281-23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골목골목 찾아가는 방역 봉사’ 추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방역 봉사·손세정제 나눔 캠페인 전개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하나로 결집기로 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들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봉사와 손세정제 나눔 캠페인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은 것에 주목하고 홀몸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의 사전예방을 위해 ‘골목골목 찾아가는 방역 봉사’를 추진기로 했다.

센터는 우선 노송동 주거취약지역과 선미촌 인근, 서학동 예술마을을 방문해 방역봉사를 추진하고 마스크와 손세정제 제작 키트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전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방역소독기를 추가 구입해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감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전지역과 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천연성분 손소독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홀몸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의 사전예방을 위해 ‘골목골목 찾아가는 방역 봉사’를 추진한다.

제 제작 키트 3000개를 시민들에게 배부한다.

이는 지난 14일 한옥마을에서 진행한 것보다 2000개가 늘어난 규모로, 키트제작에 참여한 지역교육연구소 전문강사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아울러 센터는 전지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화상카메라의 감시 작업에 자원봉사자 20여 명을 투입해 24시간 비상대응 근무로 지켜있는 공무원들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완산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완산구청사 1층 로비에 열화상카메라 배치·공원 화장실 등 매일 소독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황권주)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기로 했다.

완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구청사에 열화상 카메라를 운용하고, 시민 생활권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완산구청사 1층 로비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방문자의 체온을 감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부서별

전담인원을 선정하고 철저히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가 열화상카메라에 감지될 경우 전담요원이 증상을 즉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게 된다.

또한 구는 완산권역 57개 공원 화장실에 대해서도 매일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구청에 배치된 병해충차량을 동원해 도심의 주요 골목골목에 대해서도 방역을 추진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입원·격리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감염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역학조사 정원은 3배 이상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감염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 심의됐다.

감염법 개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원 부과 조항만 있었지만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다.

또 감염법 의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자가·시설격리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감염법 의심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자, 감염

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이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자 등이다. 정보통신기 등을 활용한 증상 유무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부를 이관·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뉴시스